



“R&D 예산 3%, 과학문화투입”

과학기술로 ‘1만 달러 벽’ 넘어서야

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
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박기영 위원장

“이공계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2007년까지 연구개발 예산의 3%를 과학문화 부문에 투입해야 합니다.”

금년의 경우 약 0.7%로 추정되고 있다.

새 정부 들어 가장 활발하게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박기영(44, 순천대) 교수는 “과학문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 가치가 되기 위해서 과학문화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”고 역설한다.

박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미래전략분과의 간사역을 맡아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. 그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자문교수로 종합적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.

정책의 핵심방향은 첫째, 우리 생활과 사고가 보다 합리적·과학적으로 변화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. 둘째는 정체상태에 빠진 경제발전에 과학기술

이 새로운 추진력이 되도록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.

“국민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이공계가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도록 다양한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.”

박 교수는 이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부처로의 이공계 출신 진출확대, 기술직을 위한 공직 개방 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. 열린 정책을 위해서는 ▲생명·환경·안전 등 분야에서 집단의 이해가 충돌하는 정부 정책 수립에 대한 민간 참여 ▲ 각종 회의의 가능한 공개 ▲ 과학기술관련 부처와 타 부처간의 순환 보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.

또한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과 과학전문방송 설립, 지방과학관 확충 등 국민이 참여하는 과학문화활동을 강조한다.

박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은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이 된다면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.



“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이 1만 달러가 되면 과학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약해지는 일반적 경향이 있습니다. 따라서 1만 달러가 넘 으려면 이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과학기술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해야 합니다. 정부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수단이며 사회시스템 의 근간이 되도록 추진중입니다. 참여정부가 말하는 과학기술중심사 회는 이처럼 과학기술이 국가의 발전을 이끌고 합리와 창의를 중시하는 과학기술적 마인드가 자리잡는 사회입니다. 여기에는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겠 지요.”

박 교수는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한다. 과거 역대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다짐했던 과학 기술 중시 약속이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되지 않았느냐는 점을 지적하자 그는 최 근의 여러 움직임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확언한다. 취임 1백일 기념연설 에서도 노 대통령은 기술혁신을 누누이 강조했다는 것이다.

1984년 무렵 YMCA 등에서 과학NGO 활동을 하면서 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 다는 박 교수는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.

“10~15년 이후 우리가 먹고 살 기술이 무엇인지를 정부부처의 담당자가 모여 협의하고 있습니다. 7, 8월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.”

6월 25일 모 호텔에서 ‘반도체 이후 성장동력을 발굴하자’는 정부부처간의 미 래전략기술회의를 진행하다 기자와 만난 박 교수는 의욕이 넘치는 여성과학자로 국내 과학기술인 사이에는 아직 미지의 인물이다. 그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 선거 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.

IMF 환란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정권에서 대학과 연구소에 갑자기 벤 처 바람을 불어넣어 많은 교수와 연구원이 혼돈 상태를 겪었다. 여기에는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과학기술계는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. 이 와중에 새 정부의 구상이 기존 체제와 어떻게 접목될지 몰라 과학기술인들은 박 교수의 역할을 주시하고 있다. ⑤

글_장재열 한국과학기자협회 미디어센터장 kpb11@hanmail.net

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구축'은 대통령 의지